

한국 유기비료신문

Korean Organic Fertilizer Newspaper

제122호 2020년 4월 28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발행

www.kofic92.or.kr / Tel 043) 231-3920 / 창간 2008년 10월 10일 월간

유기질비료 품질점검결과 다수업체 캡사이신 검출

**음식분말 외 골분·어분 원료에서도 캡사이신 검출
캡사이신 검출 0.01mg/kg 허용기준치 재검토
시료의 비균질성으로 인한 검출 분석값 오차 심각**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이하 '음식분말')을 사용할 수 없는 유기질비료에 해당 물질 사용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캡사이신 분석법을 사용함에 따라 동 캡사이신 분석결과로 인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수십여 곳이 행정처벌과 지원 사업 참여제한 위기에 처해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9년 3월 28일 음식분말을 혼합유박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에는 사용가능한 원료로 지정하고 그해 11월 28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을 고시했다. 음식분말에서 검출된 캡사이신을 활용하여 사용여부를 확인한다는 것과, EC함량과 염분함량을 이용하여 건조분말 사용량을 확인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당시 캡사이신 기준치 0.01mg/kg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하 '유기질비료조합')에서는 캡사이신 성분은 원료로 사용하는 골분에서도 검출되며, 국내 유기질비료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여건상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혼합유박의 생산을 동일라인에서 하고 있어, 생산라인에서 일부 음식분말이 혼합유박 제품에도 혼용될 수 있기 때문에 0.01mg/kg 기준치를 재검토 후 조정(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료생산업체에서는 올해 상반기 품질유통단속 검사에서 캡사이신 검사방법에 의한 기준치(0.01mg/kg) 이상 검출된 분석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로 유기질비료 공급 및 대금 결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캡사이신이 검출된 상당수

의 비료업체에서는 음식분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골분, 어분에서도 캡사이신이 검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명자료로 세균계산서, 매입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다.

골분·어분을 제조하는 업체는 비료·사료업자로서 골분의 경우 도축장 부산물이 들어오는 경우와 감자탕집 등의 뼈다귀가 골분원료로 들어오고 있다.

A 골분제조업체 관계자는 감자탕집 뼈를 꼭 써야하는 질문에 “생뽀가 부족하다. 일반 가정에서 조리 후 뼈는 생활쓰레기로 분류된다. 폐지 잡뼈는 사료공장으로 가고, 소뼈는 스프레드회사로 가는데 골까지 우려내고 있다. 생뽀속의 유지성분은 작업하기 힘들뿐더러 유지성분이 다빠져야 골분이 될 수 있다. 생뽀는 질소Q비율이 높게 나온다. 골분 공정규격은 질소1, 인산

15 전량의 함계량 20으로, 질소비율이 높으면 인산 비율이 낮기 때문에 생뽀만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B 어분생산업체 대표는 “어분의 경우 과거에는 어획량이 많아 원물을 그대로 어분원료로 사용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가공후 남은 잔재물을 사용하고 있다. 원료는 오징어, 명태, 대게류, 멸치, 어묵 가공업체 등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물량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음식점에서 나온 폐기물은 들어오지 않는다. 가공과정에서 소비자 기호에 따른 매운맛 제품생산을 위해 사용한 고추의 잔재물이 부산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캡사이신 함유는 불가피하다. 어분 생산과정에서 캡사이신이 함유된 원료를 분리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0.01mg/kg 기준치는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기질비료조합 안형덕 전무는 “캡사이신이 유해물질이 아닌 음식분말 사용여부 판단용 보조지표 임에도 유해물질 보다 더 엄격한 기준

으로 규제되고 있다”고 하면서 “원료의 보관 및 투입과정 등 다양한 경로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물질 사용여부를 판별토록 해야한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캡사이신 검사방법은 고시(2019.11.28.)와 동시에 계도기간 없이 시행 됨에 따라 생산업체 자체적으로 캡사이신 분석을 의뢰할 분석기관(3개)이 적을 뿐만 아니라 분석능력 검증도 미처 되지 못한 상황이다.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경우 그동안 비료·사료생산업 등록을 한 원료업체로부터 골분, 어분을 구매해오며 따라 관련 제도에 의해 품질이 관리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과거의 관행에 따라 별도의 캡사이신 성분분석 등의 과정 없이 원료를 확보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다. 또한 원료 보관 및 투입과정에서의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부분도 0.01mg/kg 이라는 불검출 기준치를 비켜가기엔 업체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김은혜 기자]

힘내라 우리 비료!

힘들어도 GO! GO!

어느 때보다 힘든 지금, 그래도 축산과 비료사업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전 품목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약취
NO
가스

..... 만나면 끝!

약취로부터 해방~

가격 할인 20%

+ 추가 할인

안개·고압 분무용

에어리페어 + FS골드

원료 혼합·고압 분무용

뉴트로

1. 제품별 상세 내용 및 가격은 홈페이지와 소핑몰 참고

2. 첫 구매인 경우 회사 정책대로 반값 할인 적용

3. 관급 지원사업은 해당되지 않으며, 10% 증품 제공

최대 40%

(기간 : 2020. 5. 15까지)

우린네이처

☎ 031-609-2142

응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토피아이원 B-1017

www.woorin.info www.약취제거제.com

새로워진 공익직불제 5월부터 실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고시) 행정예고도 함께 추진(4.21~5.1)

5.1일부터 공익직불금 신청·접수(5~6월) 예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5.1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지급을 위한 지급요건과 기준, 단가 등을 확정했다.

새롭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이 실천하여야 할 준수 의무 사항의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고시)행정예고도 함께 추진(4.21~5.1)한다.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0.5ha이하 농지등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한다.

면적직불금의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별 총 17개 사항으로 확정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는 한편, 반복 위반한 준수사항의 최대 감액비율은 40%로 적용하도록 했다.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 총 4개로 구성된다.

한편,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했다.

우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규정했다.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농업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5.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추어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농관원 등과 현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신청접수시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안내하여 농업인 등의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PR]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정 농촌발전 정책자료 반영

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제8편 출간

청년·귀농·여성 농업인 등 등록 현황 수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력, 농지, 품목, 시설 현황 등의 정보를 주제별로 분석·제공하여 농업정책 연구와 지방농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부당수급을 최소화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2019년 말 기준 1,699천 경영체 정보를 구축했다.

농업인 자문의사에 따라 등록된 인력, 농지, 시설 등 방대한 농업경영체 정보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농업정책 수립 및 연구 활동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농관원은 2018년 5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분석한 자료집을 분기별 발간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 발간된 제8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바라본 농업인력 현황'에는 청년·귀농·여성농업인 등 등록 현황 및 최근 농업경영체 등록 추이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세부 내용으로 ① 농업경영체 인적정보 등록 현황, ② 후계·청년·청년창업농업인, ③ 여성농업인, ④ 다른 산업에서 전환한 농업인

(귀농), ⑤ 소규모(0.5ha) 경작 등 주제별 현황·특징 분석과 더불어, 관련 정책 및 통계, 전문가 의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책 활용 사례 등을 포함했다.

특히, 제8편 '농업인력 현황' 분석에서 눈여겨 볼 사항은 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농업경영주와 농업법인은 증가하나 경영주 외 농업인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경영주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청년, 여성, 다른 산업에서 전환한 농업인(귀농) 등의 신규 등록과 경영주 외 농업인이 각종 농업정책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영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농업법인의 증가는 법인세 감면과 농업정책 사업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 2015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을 의무화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청년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 지원금 보조, 여성농업인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청년과 여성 농업인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개편과 지방농정 계획 수립 등 정책 기초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PR]

2020년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 지금부터!!

올겨울 대비, 전국 가금농가 방역시설 일제점검 추진

최근 유럽, 중국, 대만 등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올겨울 야생철새 등으로 인한 국내 유입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과거 주요 발생원인인 인 오염된 출입 차량·사람, 야생조수류 등으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서는 방역 시설과 소

독설비의 적정운영이 가장 중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겨울철을 미리 대비하고 상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닭과 오리 등을 사육하는 전국의 모든 가금농가이며 농식품부와

지자체 점검반이 4.27일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간 단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전실·울타리·그물망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고, 출입 차량 통제와 소독 요령 등 방역수칙 지도·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확

흡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정비·보수를 명령하고,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수령,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재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가금농가 대부분이 계열화사업자 소속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점검 결과를 2020년도 가금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에도 반영하여 정책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점검과 더불어 전국

단위 예찰·감사, 교육·홍보, 제도 개선 등 관계기관, 지자체, 단체 등과 협력하여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가금 농가에서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에 문제가 없도록 매일 자체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축산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진출입로에 생석회 도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PR]

정부 입증책임제 확산으로 선제적 규제정비

규제개선 방식을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2020년 4월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자체 계획에 따라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규제혁신에서 갑(甲)과 을(乙)의 입장을 뒤바꾼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입증책임제의 내실화와 확산을 위해, 입증 대상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규제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소관 법령을 11개 분야로 분류하고, 국민생활, 신산업, 지역개발 분야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정비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과 기업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입증요청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0.4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내용과 존치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R]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분석 품질은 높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인과 농산업체 대상으로,

4.1~ 6.30(3개월간) 모든 분석항목 수수료 30% 인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재단)은 그동안 창업보육업체, 기술이전업체와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분석 수수료 할인을 실시해왔으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활동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개인과 농산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모든 분석항목에 대하여 수수료를 30% 인하한다.

재단은 비료·농약시험연구기관, 사료시험검사기관 등 농산업 11개 분야에서 시험연구기관을 지정 받았으며 농업분야 단일기관 최대 항목인 1,300여 항목에 대하여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단 박철웅 이사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위축에 따른 고객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재단에서는 이들 농산업체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재단도 어렵지만 과감하게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 일수록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R]

기업승계도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 필요

기업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기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28일 개최했다.

김덕술 공동위원장(삼해상사(주) 대표이사)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승계가 필요하지만, 현행 사전

증여를 지원하기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 제도」에 대한 발표를 통해 사회 전반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CEO 27% 이상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속적으로 증

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때 기업승계가 원활치 않을 경우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출될 위험에 노출되고, 수십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 등 사회·경제적 자원이 사장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 중소기업 노령화에 따른 기업승계 논의는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 성장, 경제의 안정성 제고, 일자리 창출 및 유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기업승계 세제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조세부담이 10년 전에 비해 3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지식도 이미 나이 들어 승계를 받아야 하는 노승계(老老承繼) 위험이 상존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제 경제를 보다 젊게 하고 역동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기업승계도 상속 관점에서 증여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사전증여 제도의 활성화와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선 현행 100억원에 불과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법인기업 중심에서 개인기업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제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상속공제제도 사전/사후 요건이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맞게 현실화 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가 가중됨에 따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기업승계를 통해 일자리가 유지되고, 창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기업승계 정책마련과 세제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R]

친환경유기질비료(퇴비) ...

흙을 살리고,
물을 살리고
환경을 살립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KOFIC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회
Korea Organic Fertilizer Industry Cooperative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540-44
TEL. 043-231-3920 / FAX. 043-231-3928
Email, kofic92@unitel.co.kr / www.kofic92.or.kr

전남도, '친환경농자재' 지역제품 구매 캠페인

이통장·농업인·단체농협 등 176개 기관·단체 공동 참여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업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농자재 등 지역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섰다.

도는 본격적인 영농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자재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통장연합회를 비롯해 농업인단체연합회와 지역농협 등 176개 기관단체를 비롯, 도민을 대상으로 농자재 지역제품 우선 구매에 동참토록 오는 5월 31일까지 공동 홍보·캠페인을 펴기로 했다.

현재 전라남도내 농자재 생산업체는 유기질비료 71개소, 규산질 2개소, 석회고토 1개소, 폐화석비료 6개소, 우렁이 95개소, 친환경 병해충제 27개소 등 213개소이다.

농자재 지역제품을 사용할 경우 지역자본 타지역 유출 방지와 일자리 창출 및 인구감소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 가축분뇨 처리문제 해소,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등 1석 5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

업'의 경우 올해부터 농자재 구입비의 50% 이상을 지역제품에 사용토록 의무화 했다.

또 시군간, 지역업체간 협업도 활성화한다. 가축분퇴비 생산시설이 없는 시군은 타시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기보다 도내 인근 시군 생산업체 또는 축협과 상호 협업해 지역제품을 구매토록 유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농업인이 지역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가 생산한 280개 제품에 대한 판매희망 가격을 조사해 도와 시군 누리집에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친환경농업인 단체와 읍면농협 등에도 제공한다.

유동찬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영농현장 수요에 맞는 친환경 농자재 개발과 생산시설 현대화 등을 적극 지원해 농자재산업을 전남의 블루이코노미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비료 등 각종 농기자재는 반드시 지역제품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PR]

화성시, 노후 돼지 농가 환경오염 중점 점검 실시

1995년도 이전 돼지 사육시설 45개소 점검



화성시는 최근 돈사 분뇨유출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 및 악취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시설이 오래된 돼지사육시설을 중심으로 2달간('20. 4. 7. ~ '20. 5. 29.) 돼지 농가의 분뇨 관리실태를 점검 실시한다.

돈사 분뇨의 경우 타 축종에 비해 수분함유량이 높아 분뇨유출의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점검대상은 1995년도 이전 돼지 사육시설 45개소이며, 환경오염 점검 방향은 △축산분뇨 유출·방치 등 실질적인 환경오염 행위, △퇴비저장조 관리실태, △퇴비사외에 가축분뇨 야적·투기 등 불법행위 △민원다발 돼지농가에 대하여는 축산,건축,개발행위 등 협

업을 통한 점검, △취약시간(야간) 및 휴일에 환경감시원을 통한 점검 실시 등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화성시민의 건강·위생분야와 직결되는 축산 오염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R]

영동군, 최고 품질 건강먹거리 생산 '친환경 농업' 조성 집중

지역농업의 새 성장동력 기반구축에 각별한 관심



영동군 친환경 농업 도라지 수확하는 모습

축과 친환경 재배 환경 조성으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한다.

11개사업에 18억9천1백여 만원을 투입해 △유기농산물 생산지원(1억2천5백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285명, 1억3천6백만원), 토양개량제 공급(4억5천3백만원), 유기질비료 지원(8억9천7백만

원) 등을 추진한다.

신규사업으로 농촌 환경 오염의 군은 친환경 농업에 집중해 농업선도군의 위상을 지키고 살맛나는 농촌환경을 조성해 침체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특색을 반영해 객관적이고 실천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농업의 고령화, 도·농간 소득 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친환경 농식품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를 기회삼아 고품질 쌀 적정생산 기반 구축과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로 지역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영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PR]

양산시, 축사 악취 민원 해결책 모색



김일권 양산시장장이 지난 1일 원동면 축산농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장은 1일 양산 원동면의 축산농가를 방문해 고질적인 축사 악취를 줄이기 위한 현장 확인에 나섰다.

통상적으로 축사악취는 농장마다 사육환경이 다르고, 냄새원인과 시간, 유형이 제각각이지만 특히, 퇴비사의 미부숙 퇴비로 인한 악취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악취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김 시장의 이번 현장 방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악취의 주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상황 파악 및 축산농가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미부숙 퇴비의 부숙촉진과 악취제거에 효과적인 부숙촉진제를 원

동 화제의 축산농가에 테스트 했다. 이후 부숙촉진과 악취저감 등을 확인해 효과가 있을시 축산농가에 접목을 통해 악취저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돼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비료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미부숙된 퇴비로 인해 악취발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김 시장은 "축사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등을 유도해 지역사회와 갈등 없는 공존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PR]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

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판매 제품 적용
법 시행 후 9개월간('19.12.25~'20.9.24) 계도기간 운영
평가 받지 않은 제품 출시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 대상



비료 살포 후 재활용하기 위해 수거된 비료 포장재

장재 및 이를 이용
하여 판매하는 제
품의 비료·사료포
장재(PE, PP)는 등
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2019.12.25.)
전 제조된 제품(제
조일자 기준)과 재
활용분담금 면제
대상은 등급평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제도의 실
효성을 확보하고자 재활용의무생
산자(이하 '의무생산자')에게 포장
재 재질·구조 등급 평가 의무를
부여한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는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소비
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하여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
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쉽게 생산
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비료·사료업체의 경우 전년도 연
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
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
억원 이상인 수입업자로서,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
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
톤 이상인 수입업자는 의무생산자
에 해당된다.

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

에서 제외된다.

의무생산자는 자체평가 실시 후
포장재의 제조·수입 또는 이를 이
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검토신청
서'를 환경공단에게 제출하여 등급
평가를 확인받아야 한다.

등급은 4단계로 재활용 최우수·
우수·보통·어려움으로 분류되며,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만 의무적
으로 포장재에 표시하고, '재활용
최우수·우수·보통'은 의무적으로
포장재에 등급표시를 해야하는건
아니다.

기 평가받은 포장재와 재질구조
가 동일한 포장재는 별도 평가 없
이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관리대
장'에 가입 후 출시가 가능하다.

의무생산자가 계도기간(~20.9.24)
이후 환경공단으로부터 포장재 재
질·구조 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
을 출시하는 경우, 과태료(300만
원 이하) 대상이 된다.

[김은혜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료, 미세먼지 줄었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고농도 일수 감소

4월말 이후 대기질 수치모델링 통한 종합성과분석 도출 예정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
절관리제'의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
상 시기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
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개정된 '미
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
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에 열린 제3차 미
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
리제 첫 도입을 결정하였고, 2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했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향을 준 여
러 요인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
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
로 대기질 수치모델링 등 다각적인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4월말 이후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내놓을 예정
이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담긴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
로도 매년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
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
미세먼지 상황은 전년도 동 기간
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mu\text{g}/\text{m}^3$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mu\text{g}/\text{m}^3$ 에서 약 27%(Δ
 $9\mu\text{g}/\text{m}^3$) 감소했다.

개선폭이 최대인 지역은 광주 및
전북으로 약 33%(광주 $33 \rightarrow 22\mu\text{g}/\text{m}^3$,
전북 $39 \rightarrow 26\mu\text{g}/\text{m}^3$), 서울은 약
20%($35 \rightarrow 28\mu\text{g}/\text{m}^3$) 개선됐다.

최근 초미세먼지 개선을 계절관
리제의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
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먼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
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초미
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
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중국
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미
세먼지 개선의 종합적인 원인 등 이
번 계절관리제의 시행성과를 면밀
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개선된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
겠다"고 밝혔다. [PR]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기본수칙(예시)

(매개체) 생석회 벨트구축, 울타리·기피제 설치, 퇴비장 방조망 설치,
주기적 구충·구서, 사료빈 및 퇴비장 청소·소독, 돈사 방충망 설
치 등
(차량·물품) 축산차량 농장진입 통제, 경운기·트랙터 등 농장외부
장비 반입 금지, 차량 출입 시 세척·소독, 농장 내 물품 소독 후
보관 등
(사람) 외부인 출입금지, 대인소독시설·발판소독조 설치, 출입자 기
록, 돈사 출입 시 손 씻기, 전실설치, 돈사전용 장화 갈아신기 등

양돈농장 고용 외국인근로자 방역수칙 교육·홍보 강화

15개국 다언어로 변환된 방역수칙·문자 전송, 교육·홍보 동영상 보급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
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
본')는 봄철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매개체·차
량·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위험
을 차단하고자 방역관리 강
화방안을 마련하여 총력 대
응하고 있다.

중수본은 사람에 의한 바
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양돈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홍보'에 집중할 계획

이다.

농장주·관리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 수시 배부되
는 한글판 자료로 ASF 방
역수칙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외국인근로
자는 한글판 자료를 읽고
이해하기 어려워 농장주·관
리자 등으로 부터 전해 듣
는 정도로 교육·홍보의 사
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문
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에 맞춰 15개

국 다언어로 ASF 방역수칙
을 작성했다.

ASF 방역수칙을 외국인근
로자의 각 국적에 맞는 '다
언어 문자(MMS)'를 본인의
휴대폰으로 매주 1회 이상
전송하고, 농장주·관리자에
게도 한글문자를 동시 전송
하여 공유할 수 있게 진행하
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15개국 다언어로 된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도 제

작하여 보급했다.

중수본은 다언어 교육·홍
보 성과를 중간점검하는 차
원에서 4월 한달 동안 전국
양돈농장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인식수
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
적, 체류기간, 근무지역, 문
자수신 여부 등에 따른 성
취도 차이를 분석하여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가 관계 법령
상 방역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해당 농장에 과태료 처
분등 불이익 조치를 적용하

고, 외국인근로자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돼지고
기류 등을 여행자 휴대품으
로 반입하면 본인에게 과태
료 처분할 예정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
관리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예방을 위해 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 축산환
경 개선, 축산차량 출입통제
를 철저히 이행하고, 근무하
는 외국인근로자가 방역수
칙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
고,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
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PR]

퇴비 부숙관리, 축산 농가에서 쉽고 간편하게 자가진단

퇴비 부숙 관리부터 퇴비사 확충까지 일정관리 자가진단표 제작·배포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는 ‘자가진단표’가 축산농가, 농축협, 지자체 등에 배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의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마련했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관리, 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퇴비사 확보 등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상태를 ‘퇴비 육안관별법’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반 관리하여 부숙에 효과가 큰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육규모 1,500㎡ 미만 농가는 월 1회, 1,500㎡ 이상 농가는 월 2회 이상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 뒤집기 등 교반관리 해야 한다.

- (교반 4~5일 전) 퇴비 부숙도 육안관별법을 활용하여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수분정도, 부숙 상태 등을 확인하고 교반 시점 결정
- (교반 3일 전) 축사 깔짚 및 퇴비 더미에 수분이 많은* 경우 톱밥, 왕겨 등을 판매업체에 구입 신청
* 깔짚 및 퇴비더미를 손(비닐장갑 등 활용)으로 움켜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로 분뇨 및 물기 등이 많이 나오는 경우 수분 70% 이상
- (교반 당일 또는 1일 전) 톱밥 수령 후 축사 바닥·퇴비더미에 살포
- (교반 당일) 톱밥 살포된 지점 위에 미생물 살포 후 관리기·트랙터로 교반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는 장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민간업체 등의 장비를 임대하여 교반 관리해야 한다.

농가는 월 1~2회 사용하기 위해 고가의 교반장비를 구입하기 보다는 지자체 및 농축협, 민간장비 업체 등의 임대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시·군에서는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 희망 장비 및 사용일자를 신청받고, 신청 농가의 축사 및 퇴비사 면적, 사육두수 등을 감안하여 농가별로 사용 가능 장비와 일자를 월별로 배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한 장비 임대절차는 아래와 같다.

민간업체 등을 통한 장비 임대도 같은 방법과 유사한 절차로 이루어진다.

i) (농가, 월초) 매월 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교반장비 임대를 신청해야 함. 첫 신청 농가는 ‘농업인 안전보험’을 연 1회 가입해야 함

* 농업인 안전보험은 개인 또는 농업인 전체 일괄 가입 등 지자체별 가입 방법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가입 권장

ii) (시·군 농업기술센터, 5일 내)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교반장비 및 임대일자 배정

iii) (농가, D-1) 장비 임대 전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임대료 납부

iv) (농가, D-day) 교반당일, 교반장비를 인수하고, 농장 출입구에서 장비를 세척 및 소독*. 사용 후에도 세척 및 소독 후 반납

* 세척·소독이 안 될 경우, 농장에 가축 질병이 유입되어 가축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영세·고령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내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통한 퇴비 부숙과 리 및 살포 등을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퇴비사가 부족한 농가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등을 통해 위탁처리 하거나 퇴비사를 신·증축해야 한다.

퇴비사의 신축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설치예정 부지 확보, 인허가 가능 여부, 퇴비사 면적 결정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 고정건축물(일반건축물), 연면적 100㎡ 이상 가설건축물, 연면적 100㎡ 미만 가설건축물

i) (3개월 전) 퇴비사 신·증축을 위해 3개월 전에 설계사무소와 계약하고, 실시설계* 시작

* 전문 설계·시공업체 등 계약 또는 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가설건축물 제외) 활용

ii) (2개월 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지자체 건축부서에 신청

* 퇴비사 설치 시 축사와 연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전용 협의 필요

iii) (5~6주 전) 시공업체 계약 및 착공신고 후 퇴비사 신축 시공

iv) (완료) 퇴비사 시공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15일 이내)되면 퇴비사로 사용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들이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퇴비 부숙관리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자가진단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PR]

돼지 음수관리 철저히 해야 생산성 높일 수 있어

사료 먹는 양의 3~4배 정도...사육단계에 맞게 먹여야



돼지 물 섭취 모습

돼지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올바른 물 관리 요령이 중요하다.

돼지는 사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신다. 따라서 돼지가 항상 깨끗한 물을 매일 일정한 양만큼 섭취해 수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돼지는 일반적으로 사료 먹는 양의 3~4배 정도 물을 마셔야 잘 크기 때문에 사육단계에 맞게 충분한 물을 제공해야 한다.

젖먹이 새끼돼지(포유자돈)가 먹는 물은 미지근하게 하여 오목한 접시나 컵에 조금씩 자주 공급하며 깨끗하게 관리한다.

젖을 땀 지 얼마 안 된 새끼돼지에게는 짧은 시간에도 탈수가 올 수 있으므로 포

도당이나 전해질 용액을 급수기에 추가로 공급한다.

큰 돼지(육성·비육돈)는 물 섭취량이 늘면 사료 섭취량과 체중이 자연스럽게 늘기 때문에 물을 마음껏 먹게 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물과 사료를 분리해서 주는 경우, 급수기를 사료 먹이통(급이기) 가까이 두어야 돼지가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다.

액체 상태로 사료를 주는 경우 물과 사료의 비율 1.5~3:1 정도가 돼지의 성장 능력 발휘에 효과적이며, 따로 신선한 물도 제공해야 한다.

임신한 어미돼지는 사료급여가 제한되어 공복감을 느끼며 많은 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한다.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돼지는 하루 평균 20ℓ 정도 물을 먹어야 하므로 사료를 줄 때 보조 급수기를 이용해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돼지가 물을 섭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육단계에 맞게 급수기의 높이와 수압을 조절한다.

돼지가 먹는 물을 저장하

는 저장 탱크는 돈사의 사육규모에 맞는 용량을 갖추고,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크지 않도록 조치한다.

물 저장 탱크와 급수 배관은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음수 소독 등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규호 양돈과장은 “봄철 돼지 건강은 농장의 생산성과도 직결되므로 올바른 음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PR]

공적 마스크 구매 편의성 높여

‘1인 3장’ 일단 1주일 시범 시행 후 문제 없으면 계속
대리구매 ‘5부제’ 적용 완화 … 법정 공휴일은 주말처럼 구매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주일당 ‘1인 2장’에서 ‘1인 3장’으로 늘어난다.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구매의 경우 5부제 적용을 완화하고,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1인 3장’ 구매 방안을 5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시범 시행하면서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해 함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을 완화한다.

현재 공적 마스크 구매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는데, 앞으로 자녀는 월요일이고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의 대리구매가 가능해, 외국인 중 대리구매 대상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아울러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단,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의 참전용사를 위해 100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마스크 구매·사용이 더욱 편리하도록 5개 이하 소량포장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업체의 포장 단위 전환(대용→소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기존 공적 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대용포장 마스크는 소량포장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혜 기자]

코로나19 극복 위한 정부 혜택 ‘정부24’에서 확인

정부 24,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서비스’ 제공

4월 29일부터 「정부24」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로 국민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혜택 정보를 보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이나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한곳에서 지역별 맞춤형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개인은 가구특성, 소득수준, 직종 등 여러 검색조건을 선택하여 현금, 서비스이용권, 요금 감면 및 융자 지원 등 다양한 혜택정보와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게 된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사

업장의 매출액, 신용도, 피해입종 여부 등 검색조건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맞춤형서비스는 개인정보 수집없이 각종 서비스의 지원대상 조건을 분석하여 범주화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24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국민이 받아야 할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R]

하반기, 더 독해진 코로나가 온다?…100년 전의 교훈

이번 코로나19의 정점은 이미 지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지만, 각국 보건 당국은 종식이라는 말 대신 올 가을이나 겨울쯤 오게 될 제2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는 1918년부터 1920년까지 대유행했던 스페인 독감과 닮았다.

다른 감염병보다 감염력과 치명률

이 높고 백신과 치료약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장했기 때문이다. 스페인 독감은 세 번의 대유행이 있었는데, 1918년 여름과 가을 그리고 이듬해 겨울이었다.

1차와 2차 대유행 후 일시적인 소강상태는 감염자를 분리시키는 봉쇄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했고 3차 대유행 후 종식은 집단 면역의 결과물로 파악했다. [8면에 이어짐]

‘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 발표…방역관리자 지정, 항시 발열체크

중대본,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직장·학교·사업장 방역수칙 공개
공론화 거쳐 확정…24일부터 각 부처서 시설별·상황별 세부지침 발표

정부는 회사와 학교 등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인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했다.

공동체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해야 하며, 구성원의 발열 등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12일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기본수칙(안)’ 및 ‘개인방역 보조수칙(안)’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발표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때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 원칙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앞으로 공개할

집단방역 보조수칙(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건강상태 확인(체온, 호흡기 증상 여부 등) 등을 실시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예 사업장의 고용주 등)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 지침은 정부당국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개인방역 기본수칙 및 보조수칙과 함께 최종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대본은 사무실,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및 결혼·장례 등에 대한 집단방역 보조수칙 역시 부처별로 마련·확정해 순차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민장은 “방역수칙은 생각보다

많은 논쟁거리를 만들 것”이라며 “생활에서 방역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지킬 수 있는지,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일부에서는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지 등 쟁점이 있어 초안을 우선 공개하고 공론화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들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 자율준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다만, 핵심적인 수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단체에 과태료를 물리고, 수칙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는 ‘공동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 체육시설, 극장 등 항시적으로

다중이 모이는 시설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동호회나 아파트부녀회 등 정기적 모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민장은 “사회적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모임이 열려 방역관리의 필요성이 있으며 가급적 지침을 따라 달라는 것이 정부의 권고사항”이라고 말했다.

윤대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민장은 “우리는 이제 상당 기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감염전과 규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탄력적으로 민통령 수밖에 없고,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개인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일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 활동을 영위하는 동시에 코로나19의 감염예방과 차단활동을 병행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PR]

봄철 환절기 가축 관리 요령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감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는 낮과 밤의 일교차로 인하여 몸의 면역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환절기의 큰 일교차는 가축에게도 환경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유발과 더불어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가축 관리 및 축사 환경 관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면역력과 체력이 약한 어린 가축은 온도와 습도 등 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축사 관리는 이렇게!

환절기에는 겨울 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목장 시설 내·외부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축사 내부와 외부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된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축사 주위 산이나 언덕에서 해빙기에 토사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지 점검하고 예방해야 한다.



겨울 동안 축사 내 청소와 환기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성 미생물의 서식처가 될 만한 곳을 소독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축사 주변의 배수로도 정비해 물 빠짐이 원활하게 해주어야 한다.

분뇨에 수분이 많아져 축사가 질퍽거릴 수 있으므로 톱밥이나 왕겨 등과 같은 수분 조절제를 추가하고, 분뇨가 집중 배설되는 급수기 주변이나 사료 급이기 주변에 있는 분뇨를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소 사양관리는 이렇게!

환절기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가 가장 편안하게 사료를 먹고 쉴 수 있는 외양간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소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환절기에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질병 감소에 전력해야 하며, 관리자가 다가가도 소가 피하지 않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환절기 아침저녁으로 바깥의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야간에는 보온을, 낮에는 환기를 충분히 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이므로 일광욕과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운동장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주고, 방목할 소들은 15일 전부터 축사 밖에서 방목에 잘 적응하도록 해 준다.

특히 변질하여 썩은 사료를 먹거나 비에 맞지 않도록 해야 하며, 축사 내의 온도, 습도 저하를 막고 유해가스의 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통풍을 해야 한다.

깔짚은 자주 교체하여 축사 바닥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한다. 송아지 분만 전 혹은 입식 전 축사 내부 소독은 호흡기 질병 및 설사병을 줄일 수 있다. 축사 내부의 정기적인 소독과 농장 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고 소독약을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돼지 사양관리는 이렇게!

돼지는 다른 가축에 비해 성장 단계별로 적정 사육 온도가 16℃에서 35℃까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환경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특히 돼지우리 안 온도 관리에 치중하다 보면 자칫 환기가 미흡해 습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새끼돼지는 체온 유지 능력이 부족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모유 소화능력이 낮아져 설사를 일으키고 다른 질병에 대한 방어능력도 떨어져 허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새끼돼지 전용 보온상자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젖을 떼 새끼돼지는 새로운 돼지무리의 방에서 서열 정착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시적인 온도 차이가 5℃ 이상 나면 질병 저항력이 크게 떨어진다.

또한 사육 밀도가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져 만성소모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무리로의 이동을 계획적으로 하는 등 세심한 사양관리를 해야 한다.

어미돼지는 임신 초기 큰 일교차에 따라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고 호흡기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이는 수태율과 출생 새끼돼지 수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낮에는 환기를 충분히 시켜 우리 안으로 햇볕이 들어오게 하고 밤에는 반드시 창문을 닫아야 한다.

닭 사양관리는 이렇게!

날씨가 풀렸다고 보온시설을 제거하면 새벽에 닭장 온도가 떨어져 생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방한 설비를 서서히 제거해 낮과 밤의 닭장 내부 온도 차가 10℃ 이상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낮에 창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닭장 내에 충분히 공급해 환기하고, 해가 지기 전에 창문을 닫아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줄여 주어야 한다.

봄철에는 햇볕비치는 시간이 길어져 닭의 모든 활동이 활발해지므로 사료의 질과 양을 조절해 지방닭의 발생을 예방하고 일조 시간에 맞춰 점등 관리를 해 산란율의 떨어짐을 방지해야 한다.

어린 병아리는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처음 1주 동안은 31~33℃ 정도를 유지하다가 1주일 간격으로 약 3℃씩 온도를 내려준다.

20℃ 전후가 되면 가온(加溫)을 중단하는데, 봄철에는 3~4주령이 적기로서 낮에는 온도를 높이지 않고 밤에만 가온을 하는 방법을 3일 정도 반복해 바깥 기온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 이병철]

[7면 '하반기, 더 독해진 코로나가 온다?...100년 전의 교훈'에 이어]

스페인 독감의 베일은 대유행 90년 후인 2008년에 본격적으로 벗겨진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1차, 2차, 3차 대유행 희생자를 각각 살펴보니 2차 때 가장 많았다.

종합해보니 1차 대유행 치명률은 0.3%에 불과했지만, 2차 대유행 때는 2.3% 무려 7.6배나 상승했다.

사람 유행이 소강상태일 때 바이러스는 생존 위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독하

게 변할 수 있다는 가설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다.

2차 유행 때는 아주 어리거나 나이 든 사람은 물론, 20~30대 가장 강한 연령층에서도 희생자가 늘어나는 W 형태를 보였는데 강

한 사람이 1차 때 걸리지 않아서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더 독한 바이러스를 맞이했다는 설명과 젊은 사람에게서 면역력이 지나치게 발현되는 이른바 사이토 카인 폭풍 때문이라는 설명이 공존한다.

코로나19도 그대로 방치하

면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의 길을 밟을 수 있다.

치료 약과 백신이 나올 때까지 겹쳐서 코로나19를 멀리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2차 유행의 피해도 적을 수 있다.

[출처 SBS]